

## 국민일보 치협에 공식 사과 사과공문 보내와 “소속회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손상 끼친 것 유감”

틀니 등 인공치아 시술원가의 20배 폭리 기사를 게재, 치과 의사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크게 훼손한 바 있는 국민일보사가 최근 기사잘못을 공식 인정하는 사과공문을 치협에 보내왔다.

그러나 치협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일단 국민일보사의 사과는 받아들이지만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취소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일보는 치협에 보내온 사과공문에서 “지난 10월 8일자 국민일보에 보도된 인공치아 진료비 관련기사로 귀 협회 및 소속 회원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그 기사는 치과진료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을 반영, 독자들에게 진료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됐다”고 기사취재 배경을 밝혔다.

국민일보는 “그러나 본래 취재 의도와는 달리 기사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르고 왜곡전달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이로 인해 귀 협회와 소속회원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손상을 끼친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일보는 “본지는 앞으로 정확한 보도에 힘쓰는

것은 물론 귀 협회와 소속회원들이 우리나라 치료 발전에 기여하고 노력하고 있는 사실 및 회원들의 봉사활동을 알리는데 적극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안성모 부회장과 장영준 홍보이사는 11월 1일 치과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단 국민일보사의 공식 사과에 따른 치협의 입장을 설명했다.

장 홍보이사는 본래 “치협의 방침은 인공치아 20배 폭리 기사 크기만큼, 정정기사를 요구하는 것이었으나 정정 기사를 게재하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거쳐야 하고, 역대 중재위원회 결정으로 볼 때 정정 기사를 잘못 나간 기사 크기만큼 실어 주도록 결정하는 예는 없다”면서 “국민일보사가 일단 사과 공문을 보내왔고 이들이 치과 의사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만회기사를 크게 실어주기로 약속한 만큼, 수용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8일 불거진 국민일보 기사 파문은 발생 20여일만에 일단 진정세로 접어들었다. 그러나 치협이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책임은 묻기로 한 만큼, 완전히 마무리 될 때까지는 장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 내국인 진료 허용 반대 “관련 기구 설립·의료인 단체 참여 보장” 촉구/치협 성명서

“치협 2만여 회원 일동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병원의 설립과 외국병원에서의 내국인진료 허용을 결정하는데 대해 충격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치협은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17일 즉각적인 반대 성명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외국 영리법인 설립 및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치협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의료단체의 의견을 오도하고, 동 개정안을 추진하려는 재정경제부의 의견에 심히 충격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해당 의료단체와의 충분한 토의 및 의견조율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치협은 특히 “외국 영리법인의 설립허가와 외국 의료인에 대한 ‘한시적 진료허가’ 업무를 전담하는 법적인 기구가 설립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동 개정안 추진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관련 기구의 설립과 의료인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치협은 이와 함께 내국인진료 허용과 관련, “복지부가 공공의료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공공 구강의료분야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치의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으로 2009년부터는 공공 구강의료기관이 붕괴될 우려에 처하게 됐다”며 “국무총리 산하의 ‘공공 구강보건의료 발전 대책기구’를 설립하라”고 요구했다.

## 치대 입학정원 감축 청와대 공감대 확산...조기 가시화 요구 정 협회장, 김창손 비서관 면담서 강조

청와대에 치대 입학정원 감축 공감대가 긍정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치협은 이를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해달라고 계속 요청 중이다.

정재규 협회장은 11월 3일 청와대 김창손 비서관을 면담하고 치대 입학정원 감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치대 입학정원 감축문제는 국무총리실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뤄질 안건으로 채택됐으나, 참여 의원들만 선정돼 있을 뿐 정부 사정상 아직 첫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입학정원 감축을 도출해야 할 치협 입장에서는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정책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며 부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맡고 있다. 위원으로는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보건의료계 대표로는 정재규 협회장, 김재정 의협 회장

이 선정돼 있다.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세우고 주요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주로 논의하게 되며, 현재 주요안건으로 치대입학 정원 감축안이 상정돼 있다.

이날 면담에서 정 협회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기에 논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김 비서관도 지난 정부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에서 과잉이라는 결론이 난 만큼, 매우 긍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비서관은 청와대에서 사회정책 관련 주요 정책추진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조정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치협은 "치과의사가 과잉이어서 줄여야 한다는 결론은 이미 김대중 정부 시절 의료제도발전 특별위원회에서 결론이 났다"면서 "감축시기와 규모를 결정짓는 일만 남은 만큼 빠른 시일 안에 이 문제가 논의돼 결론이 나와 한다"는 입장이다.

## '지부 인정의제' 실시 일단 유보 3차 지부장협의회

인정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교정, 보존, 구강악안면, 보철, 치주 등 5개 분과학회는 인정의 제도가 전문의제도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인정의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아치과학회는 인정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부장협의회(회장 김건일 인천지부 회장)는 2004년도 대의원총회에서 위임된 인정의 해결책과 관련, 당초 지부에서 인정의를 발행해 인정의 제도를 무용지물화 하겠다는 계획을 일단 유보, 11월 27일 보철학회의 결정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부장협의회는 11월 20일부터 21일 이틀간 경주 현대호텔에서 정재규 협회장, 신영순 치정회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3차 협의회를 열었다.

이날 지부장협의회에서는 대의원총회 위임 사항인 인정의 문제와 관련, "인정의를 실시하고 있는 교정, 보존, 구강악안면, 소아치과, 치과보철, 치주 등 6개 학회와 대화를 한 결과, 소아치과를 제외한 5개 학회가 인정의 명칭을 변경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부가 시도하려던 '지부인정제도' 실시를 일단 유보키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27일 학술대회 총회에서 인정의 명칭사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보철학회 결정을 확인, 지부 인정의제도 실시 유보 입장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이날 지부장 협의회에서는 또 "현행 치협 정관이 지부에서 직선제로 지부장을 선출하려면 치협정관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지부 임원 임기 연임과 조직이 신설되는 경우도 위배될 수 있는 등 문제가 많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각 지부는 본 협회 범위 내에서 각기 회칙을 제정하고 본 협회 인증을 받아야한다'는 치협 정관 53조 개정안을 마련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이날 협의회에서는 정재규 협회장과 신영순 치정회장을 초청한 가운데 현재 치정회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신협의 IT스마트 카드사업에 대한 각 지부 입장과 치협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